

전남도, 의대 신설 등 주요 현안 정부·정치권에 건의

지방소멸 막고 균형발전 위한 44개 정책과제 총선 공약으로 제시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이번 정부가 꼭 해결해야”

전남도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주요 현안을 발굴,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는 등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선 7·8기 대부분의 숙원 사업들이 정부 정책 및 계획에 반영되고 있으나 일부 현안의 경우 정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난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멸 위기 속에 의료 편의와 미래 산업의 추적이 되는 전남 국립 의대 설립,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은 이번 정부가 반드시 들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제22대 총선과 관련, 지역 공약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정책과제 44개를 발굴해 주요 정당(후보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에도 주요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발굴해 건의한 정책과제는 10개 대표 공약과 34개 분야별 공약으로 나뉜다. 10개 대표 공약에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최우선 공약에 올랐다.

특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 병원을 이탈하는 전공의들 사태로 추진된 공중보건의(공보의) 차출 대책에 따라 전남 19개 보건지소 공보의가 무더기 공석 사태를 빚는 등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국립의대 신설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가 지난 2021년 실시한 ‘도민 요구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전남 최우선 해결사업 분야로 ‘의대 및 부속병원 유지’를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 100명 이상의 취약지 맞춤형 국립의대의 경우 3만 4520㎡ 규모의 부지에 조성하는데 국비 98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점을 들어 모든 총선 후보자들에게 관련 공약의 추진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에도 조속한 신설을 약속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광양만권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하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지정, 육성하는 방안도 전남의 대표적 현안 사업이다.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을 엔지니어링으로 삼아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광양에 전기가 100만대에 공급할 9만 t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을 갖춘데다, 오는 2026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0만 t 규모의 전구체(양극재 원가의 70% 차지) 생산 시설 투자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남도는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하기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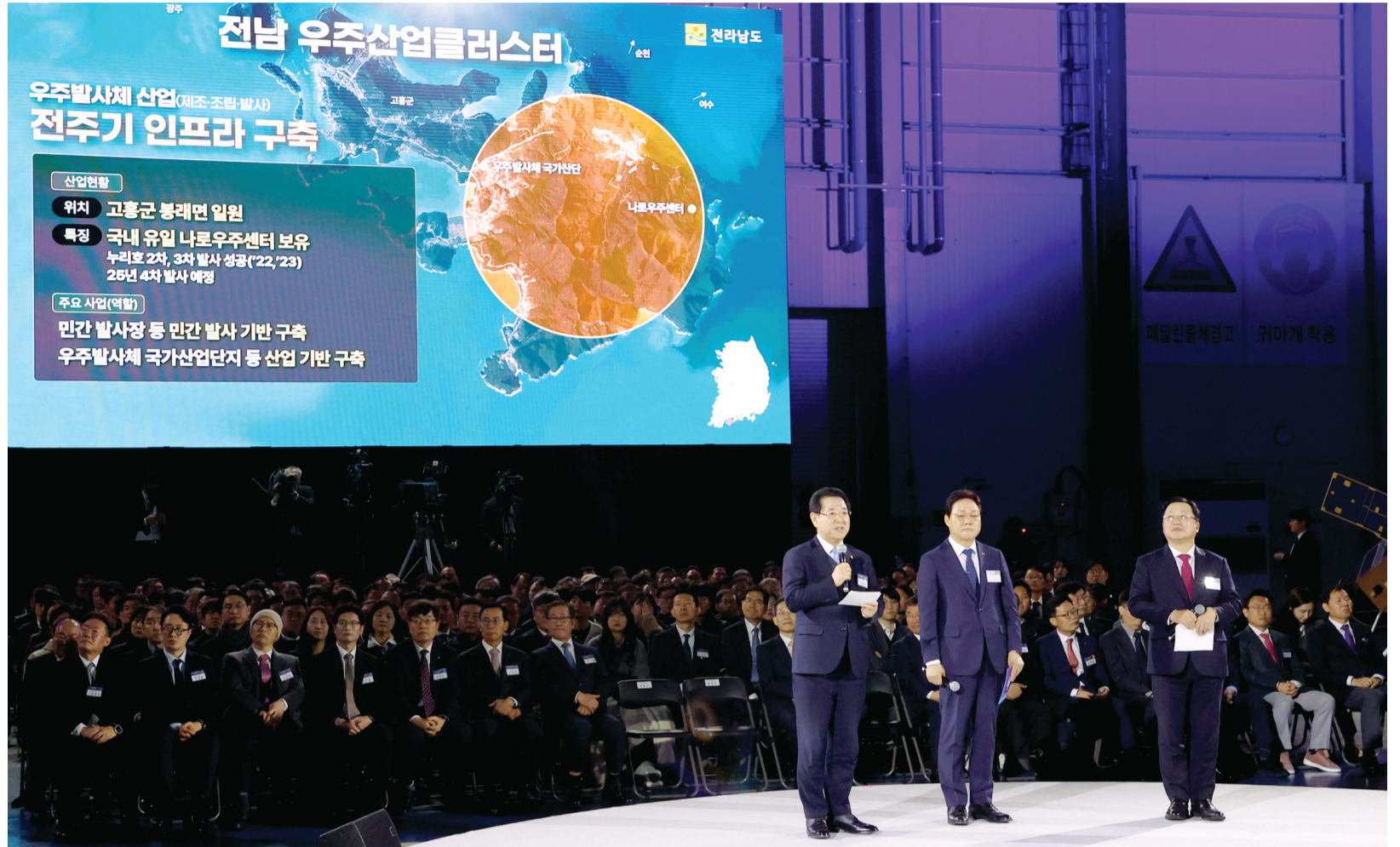
서남권 SOC 확충을 위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대표 공약이다.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광주·영암 속도 무제한의 신개념 고속도로(연장 47km)를 만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및 슈퍼카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조속히 반영하는 한편, 한국판 아우토반 건설을 위한 별도 설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함평·순천을 잇는 전남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과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구축, 원자력 의학원 설립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전남도는 대표 공약 외에 분야별 공약도 발굴, 정부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SOC 7건 ▲농·수산 4건 ▲복지환경 3건 ▲관광 문화 3건 ▲기획행정 3건 등이다.

특히 고흥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오는 2031년까지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민간 발사장 기반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우주센터 조성 등 관련 기반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전남도 제공>

주유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유튜브 등에서는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잇달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립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방통위 관련 고시 제·개정안 의결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대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

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10대와 축석만남 하려다 닳아 걸린 어른들 ▶6면
광주FC, 원팀으로 우승 향해 달린다 ▶19면
팔도 핫플레이스-강원도 소금산 그랜드벨리 ▶22면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